



日, PE 포장지 수입 호조세
중국산 등 50% 이상 급증세, 친환경 여부 관련

일본의 PE 포장지 수입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 2004년도에 전년대비 30.6% 증가한 1백73억1천6백만엔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경쟁국인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전년대비 50% 이상에 달하는 수출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004년도의 전체 평균 수입증가율 30.6%의 1/2 수준인 14.4% 증가한 32억6천4백만엔을 기록,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이은 2대 공급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으나 매년 수입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제품의 특성상 품질 등의 면에서 차별화가 크게 이뤄지기 어렵고 주

로 가격조건에 의해 수입선이 결정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세관의 수입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PE 포장지의 평균 단가가 일본내 수요 증가와 원자재난 등의 영향으로 2003년도의 1kg당 1백70엔에서 1백80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경쟁국산의 단가도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와서도 일본의 PE 포장지 수입이 2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46.7% 급증한 33억2천2백36만엔의 실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60% 이상 증가한 가속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대의 증가율로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PE 포장지의 용도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유통업체들이 많이 수요하는 상품



포장용 봉투, 쓰레기 봉투, 규격 봉투 등이 전체적인 수입증가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쇼핑백이나 쓰레기봉지 등 일반적 용도에 사용되는 PE 필름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한국산이 동부문에 신규 참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투명도가 높은 고급품이나 친환경성 제품, 농업용 필름, 물류용 스트레치(Stretch) 필름 등 특수 용도 분야의 경우 한국산의 품질(기술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별도 인증 및 라벨링제 도입

환경친화제품 생산 사용 협정체결

유럽 플라스틱산업계가 지난 2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머(Polymer)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자율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참여 기업들은 폴리머 생산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첫째, 관련 유럽 규격인 EN 13432의 체계적 사용, 둘째, 별도의 인증제도 도입, 셋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서유럽의 폴리머 시장 규모는 연간 3천8백12만톤으로(2002년 기준) 주요 소비산업은 포장재(식품용기, 랩(wraps), 네트(nets), 폼(foams)), 식품 쓰레기 수거 및 슈퍼마켓용 플라스틱 백, 케

이터링 제품(일회용 접시와 컵), 농업, 위생용품 등이다. 이번 환경협약은 이중 첫째와 둘째 그룹인 포장재와 플라스틱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폴리머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포장재, 플라스틱백, 케이터링제품, 위생용품 업계에도 환경친화제품 사용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진전 현황에 대한 우리 관련 업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플라스틱업계가 체결한 자율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럽규격의 사용 확대이다.

폴리머와 관련된 현행 유럽 규격인 EN 13432를 수정, '생물분해 가능한(biodegradable) 재료/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해, 관련 업계의 준수를 촉구한다. 새로 정의된 생물분해 가능한 제품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물분해가능성 지수는 1백80일내에 섬유소(셀룰로오스) 90% 이상, 분해(disintegration) 수준은 3개월간 90%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유독성면에 있어서 유독성 검사를 통과(germination, plant tests)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별도 인증제도의 도입이다.

새로운 기준에 의거해 만들어진 환경친화적인 폴리머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인증시 독일의 DIN CERTCO가 운영하는 기준과 제도를 사용한다. 새로 도입되는 인증은 다음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로 EN 13432에 정의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되며, DIN Certo가 자체 품질관리 제도를 준수하는 검사기관을 선정, 승인하게 된다.

모든 검사결과와 관련 서류는 인증기관(독일에



있는 DIN Certo)에 제출된다. 2단계로 승인된 전문가가 제품 인증을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제품 성질(원자재 구성, 성분, 색상 등)을 고려,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전문가그룹은 DIN Certo에 의해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별도 라벨링제도는 인증에서 통과된 제품에 대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별도의 라벨링제도를 도입한다.

이 자율협약은 '국제 생물분해 가능 폴리머 협회'인 IBAW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실제 이행여부도 IBAW가 감독한다. 진전 현황은 2년마다 점검되며,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약속은 향후 10년간 지속된다. 이 협약에는 생물분해가능한 플라스틱시장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협약에 참여, BASF(독일), Cargill Dow(미국), Novamont(이탈리아), Rodenburg Biopolymers(네델란드) 등이다.

이들 기업들이 유럽 생물분해 가능 플라스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 기업 이외에도 IBAW(International Biodegradable Polymers Association and Working Group), Plastics Europe(The federation of plastics producers in Europe), ERRMA(The European Renewable Resources and Materials Association)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플라스틱 산업계의 자율협정 체결에 대해 EU 집행위도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정 체결을 환영하면서 집행위는 현재 집행위가 계획하고 있는 폴리머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법규 도입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이번 업계 자율협약도 작년부터 EU 집행위가 환경정책의 한 큰 골자로 채택, 추진하는 "강제법규 제정 가능성을 활용, 업계로 하여금 자율협약 도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의 또다른 성공 사례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中, 1분기 지류가격 상승 생산비용 원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나타냈었고 이에 따라 종이 및 판지 생산 능력 또한 급속도로 확대돼 왔다. 이런 생산 확대는 대부분 지중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가격인상에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 1분기의 경우 위와 같은 공급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료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 상승폭은 당초 공급업체들의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문용지와 아트지의 경우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일부 라이너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골판지 원지 신증설이 대규모로 진행 중이라 정부의 보호막을 등에 업고 늘어나는 수요 및 고품질 지류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압박이 거의 없는 신문용지의 경우 생산업체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

에 시설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 일부 업체만이 현대화된 장비 도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 신문용지 생산은 여전히 소비량을 밑돌고 있으며 내수가격 또한 톤당 12~36\$ 정도 상승했으며 수입산 신문용지도 아시아 전체적인 가격 상승 기조에 따라 다소 인상됐다.

자국 및 수입 경량도 공지 가격은 톤당 1백위엔 정도 인상됐으며 백상지 가격 또한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펄프 비율이 적은 재생지 가격은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아트지 가격도 톤당 1백~2백위엔 정도 상승했다.

그러나 인쇄용지 생산업체들은 가격 인상수준이 펄프 가격 상승 부분을 만회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조만간 APP China(아트지 70만톤)와 UPM(백상지 45만톤)의 대규모 인쇄용지 시설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2분기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지의 경우 수입 골판지원지 가격이 생산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됐으며 미표백 크라프트라이너와 탑라이너 그리고 재생 골심지 등이 톤당 1백~3백위엔정도 인상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고품질 판지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입가격 인상에 따라 내수 골판지원지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생산업체들은 아직 목표에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인상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백판지의 경우 Ningbo APP의 70만톤 시설이 조업에 들어간 이후 시장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난

해 WLC 생산에서 1분기에는 Greyback 백판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생산업체들도 아이보리 판지와 같은 다른 지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현재 가격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태이다.

베트남, 제지산업 구조개선 시급 WTO가입 및 동남아 자유무역 체제 준비 미흡

베트남 제지연합회(VPA)는 낮은 생산성과 구형 설비로 인해 자국 제지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소비량과 고급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은 현재 3백여개 이상의 펄프 및 제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간 5백~2만톤 가량의 구형 설비를 보유한 소규모 시설이라 당국은 전하고 있다.

정부가 자산을 보유한 Vinapimex에 따르면 베트남의 펄프 생산능력은 연간 26만2천톤, 지류는 80만톤 정도로, 전체 시설의 가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베트남 업계는 펄프와 폐지를 각각 21만9천톤, 75만4천톤을 생산했으며 올 1분기 20만5천톤의 지류를 생산, 누계로 전년대비 19% 정도 늘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자체 생산 확대를 목표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태이다. 실례로 지난 2001년 Kontum 지역에서 건설 예정이었던 12만톤 규모의 펄프 시설 프로젝트는 자금부족으로 무기한 연기된바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실패로 인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베트남 업체의 펄프 자급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지난해 약 8만톤의 펄프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며 올해의 경우 12만톤으로 그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 제지연합회는 WTO 가입을 앞둔 현 시점이 베트남 제지산업 확대 및 투자가 필요한 때라 강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제지업체들이 WTO 가입과 동남아시아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 지적하고 있다.

**대만, 3대 플라스틱 사용금지결정
PLA 재질 대체 필러 용기 수입 확대 전망**

지난 달 11일 대만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는 오는 9월 1일부터 3대 플라스틱용품의 전면적인 사용금지하고 이들을 폴리락타이드(poly lactide, polylactic acid: 이하 PLA) 재질의 용기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보호서 장주언(張祖恩) 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입법원은 "폴리스티롤(polystyrol) 접시의 발포 PS 재질, PET와 PVC의 계란 및 라면포장재, OPS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 이들 3대 플라스틱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안에 동의했으며, 환경보호서는 이미 동안건에 대한 예산금 약 NT\$9천7백만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금지조치는 2005년 7월에 6개월간의 시범시행기간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법원 예산심의시 입법위원들

의 정식시행시기를 조속히 앞당기도록 요구해 두달여간의 시범기간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상위 3대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만은 단지 1개 업체만이 PLA 용기를 생산하고 있어, 대만 정부 당국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현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일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단체들 역시 PLA 용기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해 그 시기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환경보호단체들은 PLA 용기의 경우, 매물처리가 아닌 반드시 소각처리를 해야 하며, 이는 기존 환경보호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또한 대체재질을 한가지로 국한함에 따라 전체 쓰레기 감량에 대한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으며, 혹 일부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서 폐기물 관리처장인 천시용위엔(陳雄文)은 이들 여론에 대해 PLA의 가공특성이 일반 플라스틱과 비슷하여 기존의 플라스틱 제조설비로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원가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더 많은 업체들이 PLA 용기생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가격 및 수급상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시범기간까지 단기간 동안 대만업체들의 PLA 용기로의 생산라인 전환작업이 분주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본 규정이 안정되기까지 해외로부터 PLA 재질의 제품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